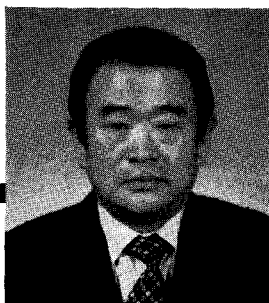


**최** 근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기간('92년 ~ '96년) 중 연평균 7%의 실질 성장을 이룩하여 오는 '96년의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달러에 달할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 50억달러 대외순채권은 1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의 水産疏外 補償받아야 할 때

## 對漁港認識부터轉換



尹 基 元

〈韓國水産會長〉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반면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에게는 아주 먼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적 피해의식 때문일 것이다.

## 들러리만 서 온 漁村

여태껏 많은 경제개발계획과 경제대책이 발표되고 추진되었으나 항상 도외시 되어온 것이 수산업이었고 심지어 농어촌개발과 농어민 경제대책에서조차도 언제나 들러리만 서 온 것이 우리 어촌이고 어민들이다.

지난 30년간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위주의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2·3차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는 동안 1차산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수산업은 1차산업 중에서도 항상 뒷전에 밀려나 저개발, 저성장, 저소득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에 따른 공해로 인해 자원감소와 간척매립 등으로 연안어장을 상실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같이 2·3차 산업의 화려한 발전의 뒷그늘에 가려 무관심속에 소외되어온 우리 어촌은 상대적 낙후현상을 면치 못하여 젊고 유능한 어민세대로 하여금 어촌을 등지게 하고 있어 지금 어촌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어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현재 60만 어민은 너무 많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업종사자의 부녀화, 노령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특히 어민의 65%가 40세 이상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연감소에 의한 20년후의 어민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러한 어촌 현실은 수산업이라는 산업자체가 몰락할 것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와 함께 앞으로 누가 귀중한 국토자원인 바다를 가꾸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연 수산업은 내버려도 될만큼 가치가 없는 산업인가

## 對水産視角달리해야

지금 대외적으로는 세계각국이 수산자원을 확보키 위해 200해리 경제수역을 앞다투어 선포하고 심지어 공해어장까지 자국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U·R 협상에 대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더 세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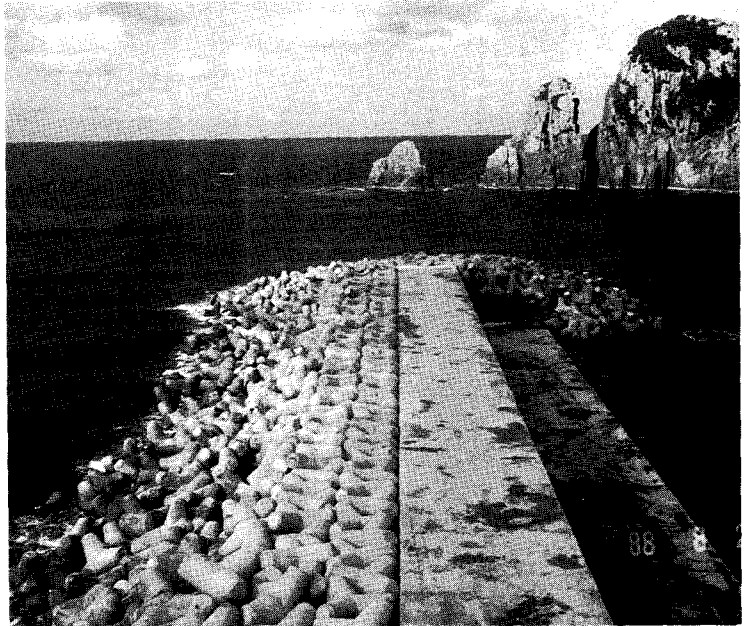
또한 대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바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처해진 어촌상황으로는 앞으로 전망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 수산업을 보는 시각은 단순히 고기잡이 만을 위한 산업으로, 어민을 고기잡이꾼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수산업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늘에 가려진 어촌을 되살리고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한 힘을 기울여 범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산정책은 과거의 수산물 증산 내지 GNP 증대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긴 안목을 가진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능률적인 어업을 실



현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인 동시에 쾌적한 국민 휴식공간으로서 어촌을 개발하여 어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어촌지역의 핵인 어항시설의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漁港은 바로 漁村’

어항은 어선과 더불어 어업의 2대 생산기반시설로서 고깃배가 드나들며 정박하는 항구로서의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어항은 수산업이라는 산업의 활동기로서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어선을 비롯한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기능과 함께 어업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인 각종 어구와 유류, 기타 어업자재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업

의 시발점이다.

또한 어항은 수산물의 유통기지로서 생산될 어획물 또는 양식물을 양륙하여 1차적으로 가격을 형성하여 거래하는 산지 시장일 뿐아니라 이들을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로서의 역할과 나아가서 수산가공품의 가공기지이기도 하다.

어항없는 수산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어선있는 곳이면 연안선 어미를 가도 어항이 있어야 하고 어촌있는 곳이면 어항을 만들어야 한다.

어항은 지역경제의 중심인 동시에 어민의 복리후생과 문화의 터전으로서 곧 어촌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항의 실태는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항시설은 1만 2,800km의 장대한 연안에 모두 1,987 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어항법에 의해 지정된 1·2·3종 어항은 불과 391개 항으로 전체 어항의 20%에 지나지 않으며 그외 1,596개 항은 어항법과 무관한 어촌부락단위의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군소 소규모 어항으로 보잘 것 없는 시설이며 개발 역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세력은 조선공업육성책에 힘입어 10만여척을 육박하여 1965년의 5만여척에 비해 2배이상, 톤수로는 950만여톤으로 5배가 증가하는 급속한 신장률을 보였으며 이에 편승한 수산물 생산량도 340만여톤에 달해 65년도에 비해 7배이상 늘어났다.

이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선세력과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어항시설은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수산업의 구조 자체를 절름발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선수용능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어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 財政開發率 겨우 64%

우리 어민이 목숨까지 걸고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고기를 배델 곳이 없어 며칠씩 위판을 못하고 기다림으로써 제값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매년 되풀이 되는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입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연평균 어선 723척, 어항 184개소로 이에 따른 피해액이 무려 121억 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항을 더 많이 건설해 달라', '어항을 더 튼튼하게

지어달라'는 어민들의 요구는 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인간본능을 충족코자 하는 것이다.

정채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아직 어항개발계획은 지지 부진으로 진척이 느릴 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한 약속도 못지키고 있다.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까지 모두 3,400억원을 투입, 1·3종어항 61개소의 기본시설을 완공하고 제2종어항 330개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45km의 어항상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부족이라는 구실로 이듬해로 떠넘긴 물량이 4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5개년계획이 끝나는 내년도에 건설할 물량이 19.1km에 금액으로는 1,310억이나 돼 현실적으로 1년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누적되었다.

이같은 실태는 정부가 손쉽게 이야기하는 예산부족 때문이기 보다는 어항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된 것이라 본다.

어항이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과 같이 모든 국민이 직접 보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 공익성에 대한 인식미흡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재정사업 개발률을 비교해 보면 주택보급 70.1% 상수도, 수리안전담 74%, 도로포장 83%에 비해 어항시설은 64%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소규모에 부실한 어항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 漁港建設 과감해야

그러나 이제 어항은 어민들만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사회의 변모로 어항은 해양성 관광과 레크레이션 도입, 도시와 어촌간 교류의 장소로서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어항의 공간활용은 매우 유용하고 고도화될 전망이다 만큼 어항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국민경제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 어민들은 분배개선 및 복지증진을 정책과제로 삼아 지역간 균형개발을 중점 추진키로 한다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낙후되어 있는 어항개발이 큰 비중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장에는 항상 사회적 갈등이 뒤따라 동전의 양면현상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이나 발전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 복지 형평,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개발 등 갈등해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경제 성장의 뒤안에서 뒤지고 소외당해 온 우리 어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어항건설에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국민화합과 복지사회 건설을 외치는 정부는 이제 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A**